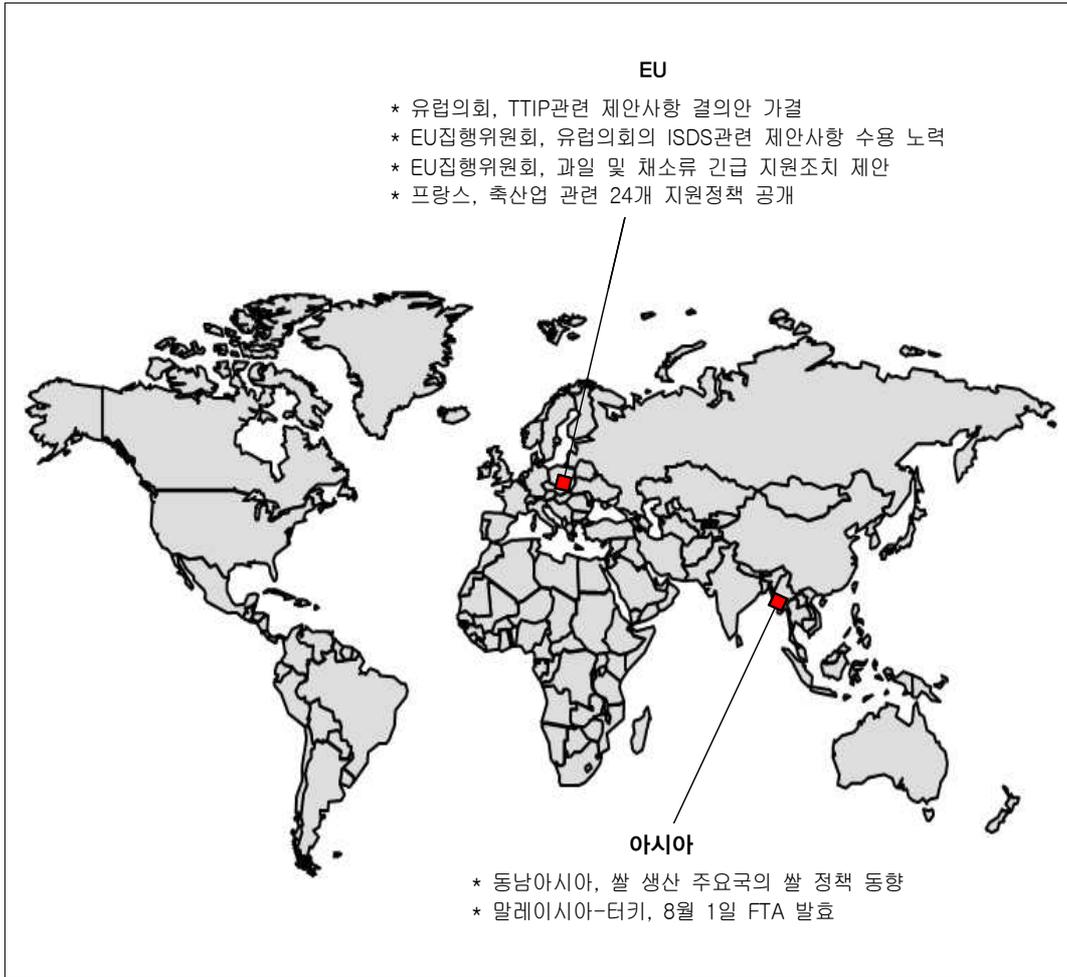


해외 농업·농정 동향

1. 유럽의회, TTIP 관련 제안사항 결의안 가결
2. EU집행위원회, 유럽의회의 ISDS 관련 제안사항 수용 노력
3. EU집행위원회, 과일 및 채소류 긴급 지원조치 제안
4. 프랑스, 축산업 관련 24개 지원정책 공개
5. 동남아시아, 쌀 생산 주요국의 쌀 정책 동향
6. 말레이시아 - 터키, 8월 1일 FTA 발효



해외 농업·농정 동향 (2015. 8)



유럽의회, TTIP관련 제안사항 결의안 가결

- **유럽의회는 EU-미국 간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과 관련하여 ISDS 조항 수정을 EU집행위원회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하였음.**
 - 금번 결의안의 핵심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조항을 철폐하고, 기존 ISDS를 새로운 제도로 대체하기 위한 것임.
 - 유럽의회 결의는 법적구속력은 없으나, 협상 당사자인 EU집행위원회는 TTIP 발효 시, 유럽议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유럽의회 결의를 고려하여야 함.
 - 금번 표결은 7월 8일 독일 스트라스부르에서 개최된 유럽의회 총회에서 이루어짐.
 - 유럽의회는 436명의 찬성, 241명의 반대, 32명의 기권으로 본 결의안을 가결하였음.
 - 이에 앞서 유럽의회 의장(Martin Schultz)은 무역위원회(ComIntra)에서 독일 사민당(Socialist and Democrat) 의원(Berndt Lange)의 보고서의 추가사항에 대한 의결을 연기함.
 - 이는 다수의 의원들이 너무 많은 수정사항들을 제기하였기 때문임.
 - 총 116개의 제기된 수정사항 중 113개가 가결됨.
 - 유럽의회 의장(Martin Schultz)은 금번 표결이 유럽의회와 TTIP를 위한 것이었으며, 이로 인해 사적중재(private arbitration)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유럽의회가 노동자문제, 사회문제, 보건 및 환경문제, 동물복지 또는 문화적 다양성문제 등 모든 분야의 모든 기준들을 낮추거나 제거하도록 하는 협정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고 함.
 - 유럽의회는 EU공공정책을 규제할 권리를 위협하는 협정 또한 받아들일 수 없으며, TTIP로 인하여 EU기준이 하향평준화되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임.

□ 민감 농산품과 유전자변형식품 관련 문제

- 독일 사민당 의원(Berndt Lange)의 보고서는 지난 5월 말에 무역위원회를 통하여 가결됨.
 - 보고서에 따르면 EU와 미국이 민감 농산품의 전체목록(exhaustive list)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해당 농산품목은 관세철폐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
 - 반면 EU 협상단은 EU의 지리적표시제(Geographical Indications, GIs)를 강력히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함.
- 다수의 유럽의회 의원들은 금번 제기된 권고사항들에 대하여 동의함.
 - 또한 동일 수준의 기준에 대한 상호인정을 통하여 무역에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완화시킬 것을 주장함.
 - 그러나 일부 부문에서 미국의 기준과 EU의 기준이 현저히 다른 수준으로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완전한 협의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함.
 - 유전자변형식품 허용, 소 사육 시 호르몬의 사용, 유전자 복제 또는 내분비교란 물질 사용 등과 관련한 기준임.

□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시스템

- 금번 가결안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기존 ISDS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임.
 - 이는 협상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 지난 3월 말 EU 무역위원회 관계자(Cecilia Malmström)는 TTIP에서 ISDS는 양측 간의 협상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주장하며 ISDS 필요성을 변호하였음.
- 그러나 유럽의회 결의안을 통하여 ISDS를 대체할 새로운 시스템이 민주주의적 원리에 부합해야 하며 분쟁조정이 투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이러한 감시는 공식적으로 지정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사원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공청회 과정을 거쳐야 함.
 - 또한 새로운 시스템은 항소제도를 갖춰야 하며, EU와 회원국의 사법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사적 이익으로 인하여 공공정책의 목표가 훼손되지 않아야 함.

- 이를 통해 유럽의 기업체들은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차별 우려 없이 더 과감하게 투자하게 될 것이며, 각 국 정부는 공익을 위한 규제를 지속할 수 있을 것임.
- 사회당그룹(S&D Group) 의장(Gianni Pittella)은 자유민주당그룹(Alliance of Liberals and Democrats, ALDE)이나 국민당그룹(European People's Party, EPP)의 자유무역주의의 견해와는 달리 사회당그룹(S&D Group)과 보호무역주의론자들은 TTIP를 통해 세계화를 억제하고 관련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주장함.
 - ISDS가 투명하고 공적인 새로운 제도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사익으로 인해 공공정책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제도는 일반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새로운 제도를 통해 차후 무역 거래에서의 새로운 규정이 설정될 것이라고 함.
- 금번 결의안에 대해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Greenpeace)는 구체성이 부족하며 기업들이 환경과 사회 및 보건문제 등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비판함.
 - 또한 그린피스는 미국이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음.

□ 유럽의회 의원들의 반응

- TTIP 조사위원(Berndt Lange)은 의원들이 EU집행위원회가 제시하는 무역협정을 무조건 수렴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 유럽의회는 무역 관계에서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협정을 원한다고 밝힘.
 - 노동과 환경부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내용을 협정에 포함시킴으로써 공정한 규정에 따른 무역을 기대한다고 언급함.
 - 또한 유럽의회는 EU집행위원회에 TTIP협상에서 ISDS 조항을 철폐할 것을 촉구하였다고 강조함.
 - 일각에서는 유럽의회의 요구사항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러한 비판에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함.
- 유럽보수개혁그룹(European Conservatives and Reformists)의 대변인(Emma McClarkin)은 사회주의자이자 보호무역주의자인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의회의 논쟁을 거쳐 TTIP에 대해 분명한 기반을 다지게 되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힘.
 - 금번 결의안은 기존보다 투명한 신규 투자자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분명한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언급함.

-EU는 투자자가 절실히 필요하며 투자자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자 한다고 함.

□ 투명성 관련 문제

- 지난 7월 6일,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TTIP와 관련한 논의과정의 투명성에 대하여 비난함.
 - 이들은 유럽의회가 보다 TTIP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였음.
 - 자유민주당그룹(Alliance of Liberals and Democrats, ALDE)의 대표(Guy Verhofstadt)는 금번 협상이 유럽 시민들과 논의하지 않고 진행된다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유럽 시민들의 가치와 이익을 반영하는 협상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 EU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규제 협력'에 대한 EU의 최초 제안서를 발행한 바 있음. 이에 앞서 EU집행위원회는 식품안전 규정에 대한 제안사항이나 다양한 기타 문서들을 발행함으로써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음.
- 유럽의회 의원들은 협상결과가 완전히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TTIP 협상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 경고한 바 있음.
 - TTIP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EU이사회와 유럽议회의 승인이 필요함.
- 최근 EU와 미국 협상단은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 융합' 부문에서 농업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고 밝힌바 있음.
 - 지금까지 9차례의 공식 TTIP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10차 협상은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브뤼셀에서 개최됨.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5.07.10)

EU집행위원회, 유럽의회의 ISDS 관련 제안사항 수용 노력

□ EU집행위원회, 유럽의회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관련 제안 사항 수용을 위한 협상 준비

- EU협상단의 단장(Ignacio Garcia Bercero)은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하에서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조항이 유럽의회의 요구사항들에 완전히 부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언급함.
 - 지난 7월 15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업계 관계자들과의 모임에서, 앞서 EU무역위원회의 관계자(Cecilia Malmström)가 밝힌 초기 입장, 즉 EU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의 요청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였음.
- 반면 미국의 협상단 대표(Dan Mullaney)는 EU가 ISDS에 대한 제안사항을 제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함.
 - 미국은 ISDS에 대한 자체적인 협의를 마쳤으며, 미국 내 협의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사항들을 협상과정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 EU와 미국 간의 제10차 무역 협상은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브뤼셀에서 개최됨.
- 지난 7월 8일, 유럽의회는 TTIP관련 조항에 대하여 EU집행위원회에 결의안을 가결한 바 있음.
 - 논란이 되고 있는 기존 ISDS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대체할 것을 EU집행위원회에 요청함.
 - 무역위원회는 ISDS를 지속적으로 지지하였으나, 제안사항 결의안 가결 이후 유럽의회의 보고서를 통하여 기존 ISDS는 오래된 시스템으로 TTIP 조항에서 철폐되어야 하는 신호로서 작용했다고 언급함.

□ 지리적표시제(Geographical Indications, GIs)와 기타 민감 사항

- EU협상단의 대표는 EU의 지리적표시제가 협상과정에서 방해요소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하면서도, 지리적표시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

므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음.

- 미국 등 세계 시장에서 EU의 소규모 생산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리적표시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함.

- 반면 미국의 협상단 대표에 따르면, 미국은 지리적표시제 관련 협상에 대해 실리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할 것이며 양측 간의 무역 활성화를 추구하는 방향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함.
- TTIP협상에서 지리적표시제와 관련된 이슈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함.
 - 미국 낙농업자 대표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강력한 로비를 통해 지리적표시제를 TTIP협상에서 제외시키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함.
- EU 협상단장은 EU가 미국과 국제식품규격(Codex Alimentarius) 설정을 위하여 EU의 식품안전기준의 수준이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노력함.
 - 초기 EU의 식품안전관련 제안사항은 양측이 이미 합의한 부문에 대해서만 국제식품규격을 빠르게 적용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명시하였다고 함.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준을 낮추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함.
 - 또한 협상에 포함될 예정인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내용에서는 음식물쓰레기와 순환경제에 대한 특정 조항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힘.
-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일환으로 EU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식품안전 관련 규정에 대한 제안문을 발행한데 뒤이어, 논쟁이 되고 있는 '규제 융합'에 대한 EU의 초기 제안사항과 함께 기타 다양한 문서들을 발행한 바 있음.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5.07.17)

EU 집행위원회, 과일 및 채소류 긴급 지원조치 제안

□ EU 집행위원회, 러시아 수입금지 조치에 대응한 신선 과일 및 채소류 긴급 지원조치 제안

- EU 농업담당 집행위원(Phil Hogan)은 지난 7월 13일 농업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의 농식품 수입금지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신선 과일 및 채소류에 대한 새로운 긴급 지원조치를 제안하였음.
 - 또한 버터와 탈지분유에 대한 개별저장지원금(Private Storage Aid, PSA)과 현재 설정된 공적 개입의 현재 기한인 '9월 30일까지'를 연장할 것을 제안하였음.
 - 상기 두 가지 제안사항이 공식적으로 제안 또는 채택되기 위해서는 집행위원단(College of Commissioners)의 승인이 있어야하며 재정 상황에 대한 심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농업담당 집행위원(Phil Hogan)과 각 국 장관들은 러시아의 수입금지 조치의 영향에 대한 EU농산물 시장의 현재 상황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여 왔음.
 - 최근 러시아는 수입금지 조치를 '2016년 8월까지'로 연장하였음. 이로 인해 유럽의회 의원들과 농업인 단체는 EU의 긴급 지원조치를 연장할 것을 다급히 요청하였음.
 - 지난 8월 수입금지조치가 시작된 이후 EU의 농식품 무역은 4% 감소했으며, 2014년에는 지난 10년간 처음으로 농식품 수입이 수출을 상회함.
- 농업담당 집행위원(Phil Hogan)은 러시아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농업 부문이 수입금지 조치 이후에도 대체로 잘 극복하고 있다고 함.
 - 2014년 8월부터 2015년 4월까지 EU의 농식품 수출액이 2013-14년 대비 5% 증가함.
- EU집행위원회는 지금까지 이례적인 시장 조치들을 적용하여 왔으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대체시장을 모색하는 등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음.
 - 그러나 특정 부문과 일부 회원국 또는 일부 지역들은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지금까지도 악화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임.

- 농업담당 집행위원(Phil Hogan)은 지난 8월 이후부터 지원된 자금을 대해 설명함.
 - EU예산에서 집행되고 있는 2억 2,000만 유로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사용되었으며, 1억 5,000만 유로는 약 76만 톤의 과일 및 채소류를 시장에서 회수하는데 사용되었음.
 - 1,300만 유로는 유제품에 대한 개별저장지원금(Private Storage Aid, PSA)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탈지분유, 버터, 치즈의 시장 유통량을 각각 3만 6,000톤, 10만 2,000톤, 5만 1,000톤 씩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음.
 - 본 제품들에 대해 공적 개입의 여지는 있으나, 지금까지 구체적인 제안이 이루어진 바는 없다고 언급함.
 - 또한 4,000만 유로는 러시아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핀란드와 발트해 지역의 낙농업자들에 대한 직접보상금으로 사용되었으며, 1,700만 유로는 돼지고기에 대한 개별저장지원금으로 사용되어 일시적으로 EU시장에서 6만 톤을 제거하는 효과를 얻음.
 - 신시장 개척하기 위한 노력은 긍정적이었으며 공동농업정책(CAP)의 농촌진흥기금 또한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함.

□ 과일 및 채소류에 대한 새로운 지원조치

- 과일 및 채소류에 대한 최근 긴급지원조치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었음.
 - 지난 긴급지원조치는 시장의 공급량 조절을 통해 유럽시장에서의 과잉공급과 가격하락을 방지 및 피해농가 보상을 위한 조치로 이루어졌음.
- 농업담당 집행위원(Phil Hogan)은 회원국 장관들에게 현재 EU 전반적인 상황은 농산물 시장의 기본적인 변동성을 고려할 때 정상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하였음.
 - 그러나 불확실성에 따라 현재 상황이 급변할 수 있으며, 신시장 개척에도 불구하고 수출품목인 과일 및 채소류의 수출은 지난 8월 이후 수출량 측면에서 4%, 수출액 측면에서 15% 감소하였다고 밝힘.
- 이에 EU집행위원회에게 과일 및 채소류에 대한 새롭고 이례적인 조치마련으로 급격한 시장변동에 따른 위험성을 차단할 것을 제안하였음.

- 유럽의회는 지난 6월에 동 조치를 요청한 바 있음.

□ 낙농업부문 지원조치 연장

- EU의 유제품시장 관측소(Milk Market Observatory, MMO)는 지난 5월 EU의 우유 직판가가 지난 5년간의 평균가격 보다 6% 낮았으며, 이러한 하락세는 2015년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함.
- 버터와 탈지분유에 대한 공동농업정책(CAP)의 공적 개입은 매년 9월 30일까지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으나, 개별저장지원금(PSA)은 3월에서 8월까지 버터에만 적용될 수 있음.
 - 최근 몇 년간 그리고 러시아의 수입 금지조치 이후로도 공적 개입은 이루어진 바 없음. 제한적으로 개별저장지원금제도가 적용되었으며 이 두 가지 정책은 안전망으로 적용되고 있음.
 - 러시아의 수입금지 조치로 금년에는 버터와 탈지분유에 대해 개별저장지원금 제도가 적용되었음.
 - 초기에는 치즈에 대해서도 개별저장지원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곧 중단되었음.
- 농업담당 집행위원(Phil Hogan)은 공적개입 및 개별저장지원금의 적용기간을 '9월 30일'에서 더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음.
 - 구체적인 기간은 밝히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공적 개입 및 개별저장지원금의 적용시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임.
- 회원국 농업부 장관들과의 모임에서 농업담당 집행위원(Phil Hogan)은 농업이 겪고 있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하는 한편,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우유의 생산량이 너무 많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언급함.
 - 강력한 수출 진흥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와 러시아 시장의 부재로 인해 올해 우유에 대한 세계 수요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그러나 세계 우유시장의 생산패턴은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요-공급 간의 막대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함.
- 농업담당 집행위원(Phil Hogan)은 유제품 시장관측소(MMO)역할의 강화를 통해 보다 빠르고 다양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자는 요청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힘.

-
- 또한 유제품 시장에 대한 공동의 이해 증진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일련의 지표들을 개발 중이라고 언급함.

- 그러나 현재의 단기적 위협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전망은 긍정적이며, 위기는 없을 것이라는 EU집행위원회의 입장을 되풀이하였음.
 - 공동농업정책(CAP)의 안전망 정책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강조함.

□ 추가 조치 요청 기각

- 농업위원회 회의에서 체코공화국,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베니아는 EU집행위원회에 추가적인 개입 조치를 통해 가격하락에 대응할 것을 요청하는 공동청원을 제출하였음.
 - 공적 개입과 개별저장지원금(PSA)제도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함.
 - 또한 버터와 탈지분유에 대한 조정 가격인상 제안을 요청하였으며, 수입금지 조치로 인한 피해 제품에 대한 수입 보상조치와 자국의 낙농업자들의 소득 감소 보상을 위한 긴급지원정책의 일시적 도입을 요청함.
- 그러나 농업담당 집행위원(Phil Hogan)은 가격 상향 조정의 요청을 재차 거절함.
 - 인위적인 가격 상승은 결국 농업 부문의 장기적 경제 안정성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함. 나머지 요구 또한 거부되었음.
- 농업담당 집행위원(Phil Hogan) 낙농업 부문의 향후 전망은 밝지만,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낙농업계의 목표는 최대한 많은 양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수요에 따라 생산되는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수요에 맞추어 생산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임.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5.07.17)

프랑스, 축산업 관련 24개 지원정책 공개

□ 지난 7월 22일, 프랑스 정부는 24개의 축산업 지원정책을 발표함.

- 프랑스 정부가 공개한 6억 유로 규모의 24개 지원조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랑스의 축산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 지원조치는 프랑스 대통령(François Hollande)과의 각료회의를 거친 후 발표됨.
- 이 중 10개의 긴급 조치는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업자들의 부채를 재조정하는 방안과 공공보증을 통한 대출로 축산업자들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 또한 12개의 구조개혁 조치에는 프랑스 및 해외의 소고기, 돼지고기 및 유제품의 소비 촉진과 가축류 공급망의 개선조치 등이 포함됨.
 - 이러한 지원조치들은 축산업자들이 프랑스 각지의 도로와 관광지를 점거하는 등의 시위로 인해 급히 발표되었음.
 - 프랑스의 농업인들은 노르망디나 프랑스 남서부지방에서 시위를 진행하여 왔으며 주요 관광지인 몽 생 미셸(Mont Saint-Michel)로의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음.

□ 연영 정책 기준 달성

- 프랑스의 금번 조치는 유제품 가공업자와 소매업자들이 축산업자와 낙농업자에게 보다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도록 하는 현행 정책의 기준을 달성하는 것에서 시작됨.
 - 농업인들은 농산물의 도매가격이 여전히 생산단가에 미치지 못하여 다수의 농업인들이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함.
 - 프랑스 농업부 장관(Stéphane Le Foll)은 최근의 계획들로 돼지고기 가격은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다고 언급하는 한편, 구매자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임을 약속하였음.
- 프랑스 정부가 의뢰하여 지난 7월 21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소고기 가격은 목표

수준의 절반인 1kg당 0.2유로 증가로 돼지고기보다 다소 느린 진전을 보이고 있음.
- 1kg 당 1.2유로까지 내려갔던 돼지고기 가격은 Plerin 경매장을 기준으로 1kg 당 1.38유로까지 회복되었으며, 이는 목표가격인 1.40유로에 근접한 수치임.

- 프랑스의 정육업체 조합 SNIV는 도매업자들이 생고기에는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지만 가공육과 냉동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다고 함.
- 프랑스 정부가 제시한 정보에 대해 SNIV의 책임자(Paul Rouche)는 현재 프랑스 정육업의 위태로운 현재상황은 소비감소에 그 원인이 일부 있다고 함.
 -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독일 등 외국 생산자들과 경쟁구조에 기인하고 있음. 경쟁자들은 프랑스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당 비용에 비해 약 9유로 가량의 고용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유리한 구조를 가졌다고 주장함.

□ 기타 긴급 조치

- 프랑스 정부는 은행들과 축산업자들이 어렵게 유지하고 있는 모든 중장기 부채 제한 논의를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음.
 - 특히 신생 농가들과 최근 투자에 지출한 농가들을 고려하고 있음.
- 일부 재정이 악화된 농가들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을 덜기 위한 국가 구호자금 지원이 제공될 것이며 구호자금 예산은 5,000만 유로로 증액될 것임.
 - 또한 프랑스 공공투자은행이 축산업자들에 대한 현금대출을 총 5억 유로까지 보장함으로써 (특히, 공급자의 부채로 인한) 현금유동성 문제를 완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힘.

□ 구조개혁 조치

- 프랑스의 정책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12개 구조적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중 6개는 내수시장을 되찾고, 제3국으로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 1,000만 유로의 국고지원을 통한 프랑스산 소고기, 돼지고기 및 유제품의 내수시장 수요 및 해외 수출증대 정책이 포함됨.
 - 또한 보다 엄격한 생산지 표기 및 제3국(특히 아시아와 EU에 가입되지 않은 지중해 지역)과의 협상진행을 통해 새로운 수출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어 있음.

- 4개의 다른 구조개혁 조치는 축산업자들의 소득 다변화와 더불어 축산업의 친환경성 제고를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음.
 - 모든 메탄 바이오가스 공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치와 태양광패널 설치에 대한 지원조치, 바이오가스 개발계획에 대한 EU지원을 위한 노력 확대 등이 있음.
- 나머지 4개의 조치들은 축산업 공급망의 경쟁력 회복을 목표로 함.
 - 여기에는 축산업에 대한 새로운 장기투자 정책, 공급망의 상거래 관계 및 계약관계 개선, 생산자에 대한 의무사항 간소화 등이 포함됨.
- 금번 각료 회의와 24개의 지원조치 발표에 앞서 프랑스의 농업부 장관(Le Foll)을 포함한 몇몇 장관들은 회의를 개최하였음.
 - 회의 이후 프랑스 수상(Manuel Valls)은 축산업자와 가공업자, 소매업자 등 축산업 공급망의 모든 부분들은 책임이 있으며, 각자가 책임감을 가질 것을 촉구한 바 있음.

※ 자료: Agra Europe Weekly(2015.07.24)

동남아시아, 쌀 생산 주요국의 쌀 정책 동향

□ 동남아시아, 경제정책 변화에 주목

- 동서냉전의 종료 후, 동남아시아에서는 개발독재 정권의 퇴진과 함께 시장경제가 도입되며 큰 변화가 생겼음.
 - 경제가 성장하면서 ASEAN과 WTO에 의한 무역자유화의 영향 등 호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동남아시아 국가의 농업정책도 크게 변화되어 왔음.
- 이하에서는 동남아시아의 대표적 작목인 쌀에 주목하고자 함.
 - 수출국으로서 태국(쌀 수출량 세계 1위, 2014년 기준)과 베트남(세계 3위)을 중심으로, 수입국으로서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쌀 정책의 동향과 그에 따른 영향을 소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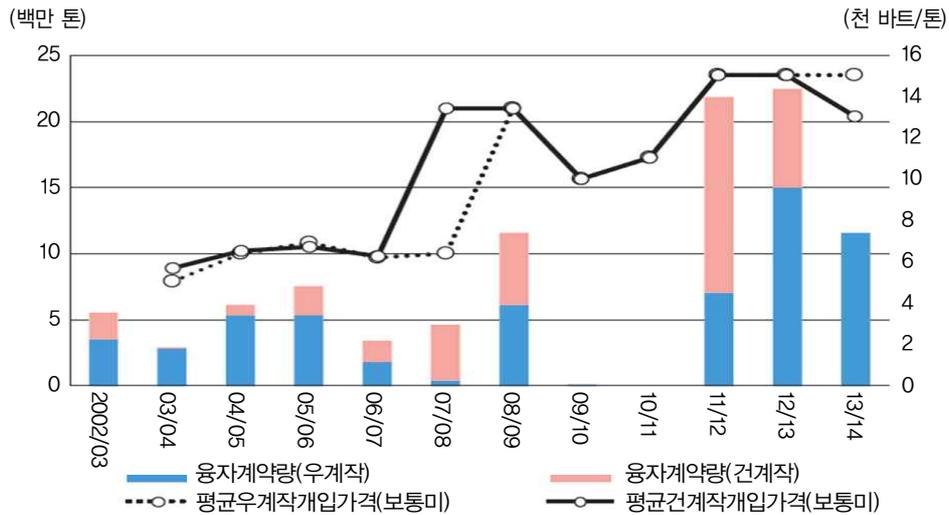
□ 태국, 가격지지정책의 파탄과 농업보호 축소

- 태국에서는 1990년대의 정치민주화에 따라 2001년에 탁신 정권이 등장했지만, 그 이후 정치집단 간의 대립으로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지속되었음.
- 농업보호정책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강화와 후퇴를 반복하면서, 확대 추세를 보임.
 - 특히 2011년에 발족된 잉락(Yingluck Shinawatra)정권은, 그 전의 아피싯((Abhisit Vejjajiva)정권에 의해 폐지되었던 담보융자제도를 부활시켜, 대규모 쌀 가격지지를 시작하였음.
 - 태국의 쌀 산업은 본 정책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음. 쌀의 고가격 형성은 쌀의 경작을 확대시켰지만, 수출은 예년과 비교하여 연간 약 400만 톤이나 감소(2011년, 2012년)되어, 많은 양의 쌀이 정부의 재고가 되었음.
 - 정치적인 목적이 강했던 잉락 정권의 담보융자제도는 수출시장에 의존한 태국의 쌀 산업에 적용한 제도설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단기간에 파탄 나는 지경에 이르렀음.
 - 잉락 정권에 의한 2년 6개월 동안 쌀 담보융자제도로 발생한 정부재정의 손실은, 약 5,370억 바트(한화로 약 17조 8,015억 5,000만 원)에 달한다고 추정됨

(태국 재무성, 2015년 2월).

- 2014년 군부 쿠데타(coup d'etat)에 의해 정권을 잡은 현재의 프라윗(Prayuth Chanocha) 정권은 발족 당시 담보유자제도의 폐지를 표명하였고, 동 제도로 야기된 쌀 경제의 혼란수습을 도모하였음.
 - 먼저 긴급대책으로 비료, 농약의 가격과 수전지대, 농작업 청부요금을 인하하고, 쌀의 생산가격 저하를 도모하였음.
 - 이는 관련 단체에 가격인하를 요청하는 등 통제적인 형태로 이루어졌음.
 - 또한 쌀의 시장가격하락 대책은 생산자와 유통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의 형태인 간접개입으로 변화되었음.
- 쌀의 보호정책을 축소한 현 정권은 결국 2014년 우계작(雨季作)에서는 쌀 농가에 일시금 지불형태로, 대규모 재분배정책을 실시하였음.
 - 이는 중소득국이 된 태국이 농가와 타산업 취업자 간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음.
 - 향후, 무역 규칙과도 조정하면서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한 농업보호제도를 설계하고, 실시해 갈 필요가 있음.

그림 1 태국의 쌀 담보유자제도 (계약량과 개입가격)



자료: GAIN Report Number: TH8165, TH4021를 바탕으로 작성.

□ 베트남, 신정책 도입 효과는 의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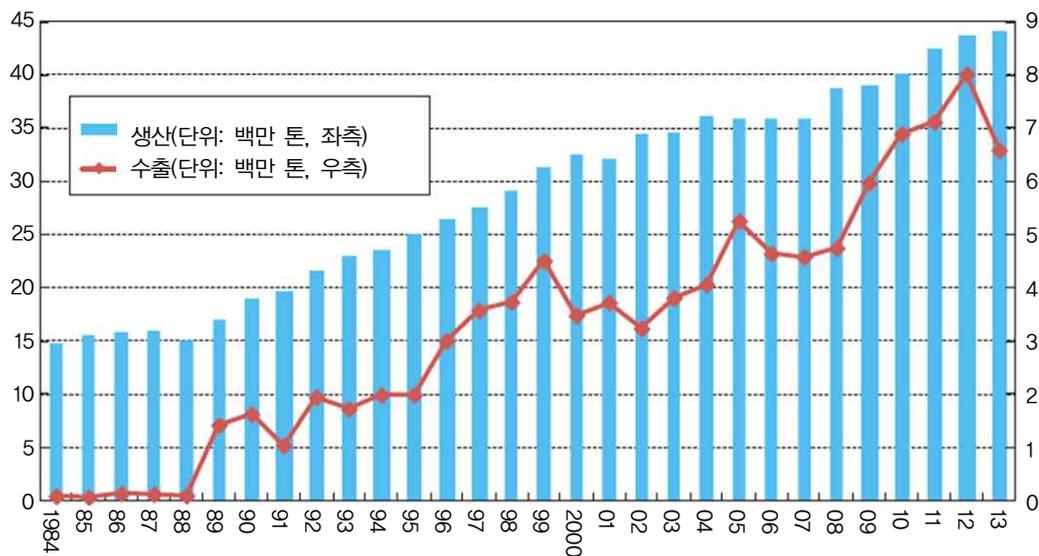
○ 베트남은 현재 태국의 뒤를 잇는 쌀 수출국이지만, 베트남에 있어서 쌀은 중요한 수출 품목이면서 국민의 주식이기 때문에, 쌀 가격의 상승은 벼농사 농가의 소득 향상과 외화 획득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한편, 도시주민의 생활에는 타격이 크며 노동자의 인건비 상승도 공업제품의 수출 경쟁력에서는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모순을 안고 있음.

- 2007~2008년 세계적인 쌀 가격상승으로 가시화되었음.
- 그 당시 베트남 국내의 쌀 가격도 상승하였고, 이는 국내 물가 전체의 상승을 초래하였음.
- 베트남 정부는 쌀의 수출규제를 실행하였고, 이는 오히려 국제 쌀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였음.

○ 이러한 혼란으로 2009년부터 ① 수전의 전용 규제, ② 비축 시설 강화(400만 톤의 저장시설 건설), ③ 영세업자 도태(창고와 도정시설을 조건으로 수출업 인가), ④ 가격지시정책 도입(최저가격·최고가격을 정하고, 업자에게 지시)이라는 새로운 쌀 정책을 강구하게 되었음.

- 동 정책은 생산 안정화와 유통 효율화를 통해 비축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물

그림 2 베트남의 쌀 생산과 수출



자료: 베트남 통계총국.

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사료됨.

- ①과 관련하여 쌀 가격상승으로 생산 인센티브가 확대되면서 결과적으로 경작면적은 확대되었음.
- ②와 관련하여 2009년 이후에는 오히려 하강 기미가 보이면서 목표치인 400만 톤에는 아직 미치고 못하고 있음.
- ③과 관련하여 소규모업자의 파산이 잇따르면서 ‘도태’라는 목적 달성했지만, 그 결과 국유기업이 과점화를 이루면서 본래의 목적인 유통의 효율화로 연결될지는 의문인 상황임.
- ④의 가격지지정책 도입은 획기적이지만, 정부에 의한 재정지출은 유통업자의 쌀 매입자금에 대한 이자보조뿐임. 가격변동 리스크를 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이러한 정책은 중국에 대한 비공식적 수출 등의 폐해를 초래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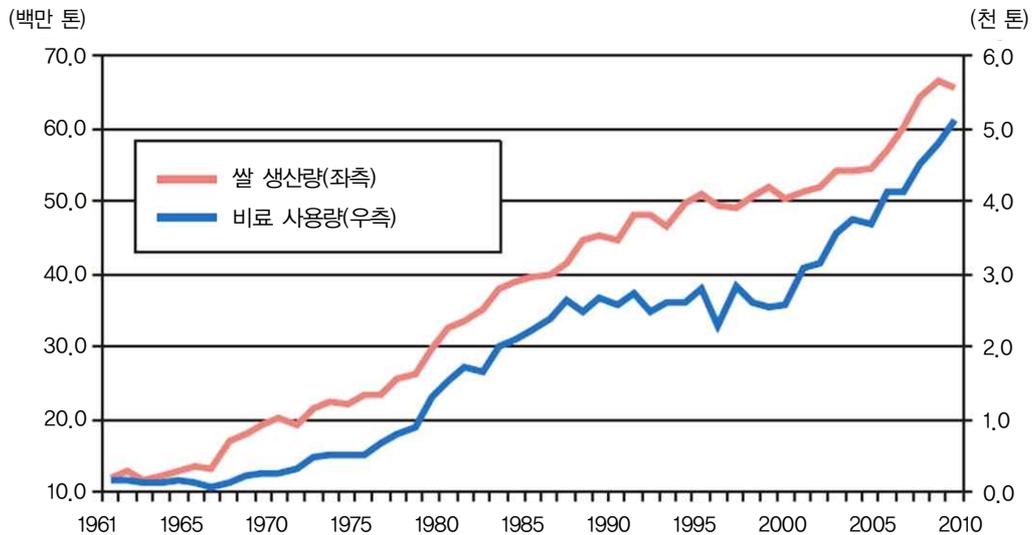
□ 인도네시아, 농업보호 부활과 쌀 증산 성공

- 인도네시아에서는 1984년에 수하르토(Suharto)대통령이 쌀의 자급 달성을 선언했지만, 1990년대에 들어가면서 빈번하게 대량의 쌀을 수입을 하게 되었음.
- 기상요인에 의한 작황의 변화를 제외하면, 이러한 대량수입의 배경으로 석유가격 저하에 따른 재정난으로 인한 1980년대 후반 이후, 농업보호가 삭감된 것을 지적할 수 있음.
 - 더욱이 1997년에 발생한 통화 위기에서는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받아 들인 이후, 비료보조금이 철폐되는 등 농업보호는 한층 약체화되었음.
 - 그 결과, 1989년에서 2001년에 걸쳐 쌀 생산의 성장률은 1.0%(연율), 단수 성장률은 0.3%(연율)까지 저하되었음.
- 그러나 수하르토 정권퇴진 후에 진전된 정치의 민주화는 농업정책에 큰 영향을 주었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농민이 정치적인 힘의 증대를 고려하면서 1990년대 쌀 생산 정체를 반성하면서 농업보호정책으로 전환하였음.
 - 그 결과, 비료보조금은 부활하였고 농업보급, R&D, 종자보조금과 관개시설 등에 대한 재정지출이 확대되었음. 2003년에 7,900억 루피아이었던 비료보조금은 2010년에는 18조루피아까지 급증하였음.
 - 쌀, 옥수수, 대두 등 우량종자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출도 2005년 800억 루피아에서 2010년에는 2조루피아까지 증가하였고, 고수량 품종의 보급도 진

행되었음.

- 이러한 극진한 보호정책의 결과로 쌀 생산은 2001년에서 2013년에 걸쳐 연율 2.9%로 증가하였고, 단수도 연율 1.4%로 상승하였음.
 -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7년에 다시 쌀 자급 달성을 선언하였음.
 - 최근 쌀 대량수입은 식량조달공사(BULOG)의 재고수준을 적절하게(150만 톤 정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1990년대의 수입과는 배경이 다른 것임.
- 현재 쌀 생산 성장률은 인구증가율을 상회하여 전환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계속되면 향후 쌀 수입은 감소 경향으로 전환될 것임.

그림 3 인도네시아 비료사용과 쌀 생산



자료: OECD,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

※ 자료: Primaff(2015.07.28)

말레이시아-터키, 8월 1일 FTA 발효

□ MFFTA, 8월 1일 발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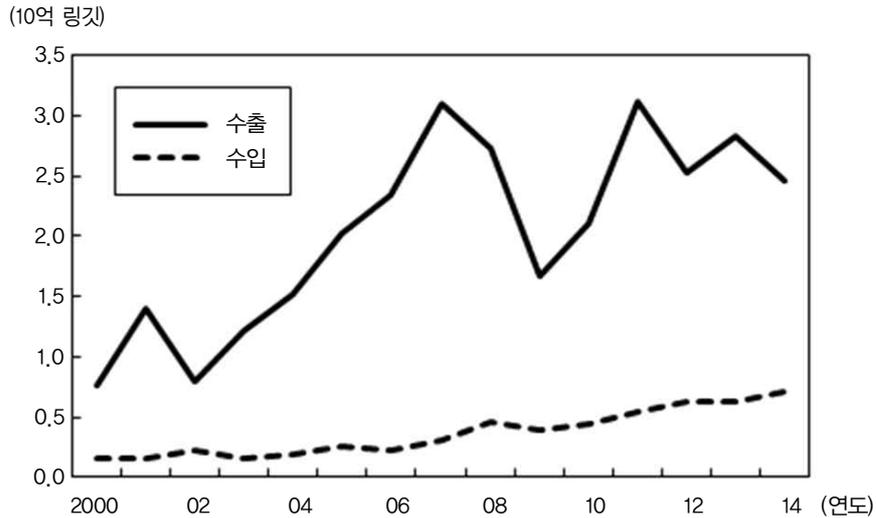
- 말레이시아와 터키의 자유무역협정(MFFTA)이 8월 1일에 발효됨. 즉시 70%의 품목의 관세와 함께, 터키가 섬유 제품 등에 부과하고 있는 추가 관세도 철폐됨. - MFFTA가 말레이시아의 무역을 커버하는 비율은 높지 않지만, 처음으로 중동 국가와의 FTA가 발효된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음.

□ 8년 후 약 86%의 품목의 관세 철폐·삭감

- 말레이시아 무스타파(Mustafa Mohammad) 국제통상산업장관은 7월 16일, 말레이시아-터키 자유무역협정(MFFTA)이 8월 1일에 발효된다고 발표함.
 - 인구가 7,400만 명인 터키는 거대한 잠재 시장을 안고 있어 말레이시아 비즈니스계에 MFFTA를 활용하도록 촉진시킴과 동시에 MFFTA는 장기간에 걸쳐 쌓아온 양국 간 무역·경제제휴를 더욱 강화하는 것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언급함.
 - 양국은 2014년 4월 17일에 협정서에 서명하였음.
- MFFTA가 발효되면, 말레이시아, 터키 양국은 관세분류 품목에 70%의 관세를 즉시 철폐함. 또한 양국은 8년 후에 철폐 및 삭감 대상품목의 비율을 약 86%로 인상할 예정임.
 - 터키의 관세철폐 계획은 (1) 협정 발효와 동시에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품목, (2) 협정 발효 후 3년 내 관세를 삭감 및 철폐하는 품목, (3) 협정 발효 후 5년 내 관세를 삭감 및 철폐하는 품목, (4) 협정 발효 후 8년 내 관세를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품목으로 나눌 수 있음.
- 2014년의 양국 간 무역액은 32억 링깃(RM) (한화로 약 9,736억 원)으로 5년 전인 2009년과 비교하여 53.4% 증가하였음.
 - 동기간 말레이시아의 세계와의 무역액이 46.8% 증가한 것부터 추산하면, 말레이시아의 대(對) 터키 무역은 그 이상으로 확대하게 됨.

- 무역 수지는 말레이시아의 흑자가 계속되고 있음. 터키로의 주요 수출품목은 섬유 등 의류, 화학제품, 팜유, 금속제품, 고무제품, 전기·전자(E&E)제품, 터키에서의 수입품은 섬유 등 의류, 기계류, 철강제품, 화학제품, 농산물, E&E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1 말레이시아의 대(對) 터키 무역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국 '무역통계' 를 바탕으로 작성.

□ 터키 측 추가 관세도 철폐

- 말레이시아 무스타파(Mustafa Mohammad) 국제통상산업장관은 말레이시아가 협정 발효 시점부터 즉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수출품목로 섬유 등 의류, E&E제품, 화학제품, 철강제품, 기계류, 목제품, 가죽제품 등 일부와 모든 고무제품을 들었음.
 - 예를 들면, 현재 의류를 터키에 수출할 경우는 4%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8월 1일 이후에는 철폐되므로, 수출업자의 가격 경쟁력 향상이 예상됨.
- 양국은 전략적으로 중시하는 품목에 대하여 당초에는 관세를 유지하지만, 협정 발효 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대 8년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게 됨.
 - 또한 터키 정부가 경상수지 적자를 억제하기 위하여 도입하고 있는 섬유 등 의류, 신발 등의 추가 관세(관세율 20~30%)도 모두 철폐됨.
 - 추가 관세는 관세분류 품목에서 1,000품목 이상에 부과되고 있음. 터키는 지

금까지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국의 상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왔음.

- 팜유에 대해서도 말레이시아의 수출업자는 혜택을 받게 됨. 현시점에서 팜유제품의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세율은 최대 46.8%에 달함.
 - 터키는 MITFA 발효 후에도 이들 제품은 전략적 품목으로서 관세로 보호하면서도, MITFA를 이용하는 말레이시아 기업은 경감 세율로 터키에 수출이 가능해짐.
 - 무스타파 국제통상산업장관은, 이러한 조치로 말레이시아산 팜유와 팜유제품이 터키 시장에서 타국제품보다도 높은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 중동국가와의 무역 확대 기대

- 양국 간 FTA교섭은 2010년 5월에 시작되었고, 거의 4년의 세월이 지나고서야 서명에 이르렀음. 국제통상산업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협정은 상품에 초점을 맞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후, 투자나 서비스 분야도 포함된 협정으로 확충하는 방향에 있다고 함.
 - MITFA발효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일반특혜관세(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을 제외하면 13개의 FTA를 소유하게 되며, 무역총액 가운데 FTA에서 커버하는 비율은 62.8%에 달한다고 함.
- 2014년 시점에서 MITFA가 말레이시아의 무역을 커버하는 비율은 0.2%에 지나지 않지만, 양국 정상은 협정 발효에 의해 양국의 무역은 향후 더욱 큰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함.
 - 서명 시 2020년까지의 양국 간의 무역액을 50억 달러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였음(2014년에는 10억 달러).
 - 또한 말레이시아에 있어서 MITFA는 처음으로 발효된 중동 국가와의 2개국 간 FTA로 중동국가와의 무역 확대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자료: JETRO(2015.07.29)

자료 작성: 홍예선 연구원